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용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탄핵 후 두 달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과학자로서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희망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정부 조직의 개편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직 개편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은 과학기술과 관련해 미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이전 정부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 과학을 합친 교육과학기술부, 박근혜 정부 때는 과학과 정보통신을 합친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부처는 여기저기 붙었다 떼었다 했지만 지나고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나면 성공한 거버넌스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벌써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관련해 국회 토론회, 과학기술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줄을 잇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방안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또는 교육부 일부를 합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크게 나누어서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탄생하느냐, 다분야 통합부처가 탄생하느냐로 나뉜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권에서 다분야 통합 부처를 만들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통합 부처를 만들었을 때 업무의 우선순위에 밀려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는 항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버넌스와 정책이 계속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선 주자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과학기술, 교육 관련 정책을 수없이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주창했듯이 차기정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세

울 것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너도나도 뒤질세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전문기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구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실현될 날도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바이오·물리학 등을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제품의 지능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생산과 서비스의 자동화, 초연결시대를 통한 지능화, 자동화 혁명이라고 이해한다. 여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등 미래 기술로 대두되는 모든 기술이 총 망라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실체도 분명하지 않고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주도할 기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

명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마케팅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너무 이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개념이 모호했던 창조경제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차기 정부는 새로운 과학 전담 거버넌스와 과학기술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 주길 바란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연구 성과는 창출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업은 발전 할 수 있다. 알파고가 뜨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포켓몬고가 뜨면 증강현실·가상현실에 투자하는 정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한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 국민의 행복한 삶, 국가 안보 유지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은 유행이나 마케팅 전략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되 한번 결정된 과학기술 정책은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과학기술 성과는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그 다음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광주교구 사무국장

영국 리치필드에는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는 1912년 4월 15일 밤산에 부딪혀 충돌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린이와 부녀자를 먼저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조타수에 가서 조경관을 잡으며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참사를 지켜보면서 이 선장을 떠올렸을 것이다.

2003년 대구 중앙로역에서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기억하는가. 그때 또한 승객을 버리고 열쇠를 잠근 상태에서 확인 않고 탈출한 가장. 2014년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 후 자신의

참된 지도자 만들기

뭍만 훌쩍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2017년 국가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박근혜와 그 적폐세력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반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대의 아픔을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도덕성 해이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연결고리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 톤니바퀴처럼 내기 살아가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이 시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 하고 싶다.

“첫째, 공부하고 경청하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의 아첨만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본인 역시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사유를 통해 진정한 참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책과 경험을 통해 공부했으나 또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

도자였다. 경청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 경청이 가능하다.

“둘째, 진정어린 신뢰성을 보여주십시오.”

1987년 북한의 금강산담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는 이유로 국민의 성금을 모아 간절한 평화의 땀을 기억하는가. 그 당시에는 두렵고 불안해 꼭 필요한 안보의 상징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후안무치가 없다. 옛것에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며 4월27일 전쟁이 난다는 가짜뉴스가 돌았다. 지금 당장 돌파구를 찾기 위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사드가 북핵위기를 막아줄 것이라 이야기하며 배치를 서두르지만, 지나고 나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도화선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뢰는 지나놓고 보니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대중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도 그 결정이 옳다면 또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부디 신뢰를 잃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는 공익정신으로 불타실

시오.”

지도자는 개인의 이익이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도자는 조직과 단체를 성장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공적 행복을 창출해야 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바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거나, 주변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선공후사(先公後私)와 지공무사(至公無私)를 표준으로 해 나아가길 때 더 큰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세월호의 아픔이 남긴 유산이 바로 이런 지도자를 찾도록 하자는 것이며, 촛불과 민심이 그 유산을 받아 역사가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참된 지도자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된 지도자를 원할 때 참된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부디 다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분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 분이기길 바라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어디에선가 지도자가 될 때 세 가지 조건을 마음속에 품어주길 바란다.

社說

세월호 3주기...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다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부활절 메시지에서 “이 나라에 더는 무죄한 이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과 유가족들에게 끝없는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며 “미수습자들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부활절이기도 한 내일모레(16일)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발생 3주다. 깊은 바닷속에 잠겨 있던 선체는 3년 만에 인양돼 물에 나왔지만 여전히 미수습자 가족들의 시계는 3년 전 그날(4월16일)에 멈춰 서 있다. 애끓는 한(恨)을 어찌하지 못한 채 과거 속에 머물며 기억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이 겪었을 슬한 고통의 세월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식을

또는 남편을 차가운 바닷속에 두고서 지나야 했던 2주기와 비교하면 세월호 선체가 부두에 거처된 뒤 맞는 모래 3주기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다행히 선체 인양이라는 큰 전환점은 맞았다. 하지만 침몰 원인 등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작업은 3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특별히 진척된 게 없다. 진짜 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해경이 정말로 구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 한 것인지,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적절했는지 등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 서라도 우리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든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슬픈 소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5·18 가짜 전단’ 유포자 색출해 처벌을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악의적인 ‘가짜 전단’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옛그제 5·18 기념재단은 “최근 서울 노랑진·정랑리, 대구 영남대·경북대 및 울산과 부산 등에서 ‘5·18 유공자 자녀 공무원 가산점 특혜’라는 내용을 담은 전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은 모두 6층인데 모두 하나같이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5·18 유공자 자녀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 자녀들’,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 따위의 주장이 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한다. 가산점을 인정한 5·18 유공자(자녀)도 전체 가점 취업자의 1.2% 수준인 391명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자 5·18 기념재단은 수사를 의뢰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이번 전단 살포의 배후에도 극우 인사 지원원 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18에 대해 솔한 망발을 일삼아 온 그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10%가산점 받은 김수자...5·18 유공자가 누리는 귀족 대우’라는 제목의 2장짜리 전단을 올리면서 “지금 사무실에 전단지 쌓였습다. 전국 방방곡곡에 도배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5·18 희생자뿐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가족에게도 상처를 준다.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악행’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 등이 아닌 오픈라인 인쇄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지원·비호하는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항쟁을 왜곡하는 세력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無等鼓

원 “기본적으로 청와대 지시가 공무원에게는 가장 강력하다.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블랙리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저항이란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11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이 이날 열린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당사자는 예술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하지만 ‘조치이나 상사의 명령을 따른 행위에 개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해묵은 질문

항행했지만 결국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 처벌을 위해 열린 ‘뉴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었던 사람은 “나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처형됐다. 일부 논란은 있겠지만,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당사자 개인에게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안병욱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명령과 복종

판결 20주년 학술대회” 기조발표를 통해 “5·18 당시 무고한 시민 학살에 연루된 현장 지휘관 그리고 맹목적으로 학살에 가담한 사병들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소 엄격해 보이지만, 지금껏 인류가 쌓아 올린 집단지성 그리고 공통의 가치관에 들어 청년 한 명을 사살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국경수비대원들은 상급과 포상휴가를 받았지만, 장병이 무너진 후엔 과실치사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우리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기고



김원태 전남대 명예교수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국인과 한국상품, 그리고 한국문화와 관광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자행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오해와 억지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글자 그대로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즉 중발 고고도 지역 방어장치이며 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중발단계에서 파괴하는 방어용 요격 유도탄을 의미한다.

중국은 사드에 포함되어 있는 X-band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시설을 탐지하고

중국이 ‘사드 보복’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

감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800km 안밖이어서 그 범위가 주로 한반도에 한정돼 있고 중국 군사 시설에 대한 탐지는 이 레이더가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많은 미국의 군사 위성이 나 첩보 위성에서 담당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모순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즉 2~3년 전 일본에 배치된 X-band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가 넘는 데도 해외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자신은 흑룡강성에 10층 높이의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 운용하고 있고 내몽고에는 탐지거리 3000km의 레이더를 설치해 이 레이더로 남북한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미국 본토까지 탐지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이 북한 방어용인 사드 배치를 놓고 화를 풀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부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한국 보복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무기를 제공하는 미국에 대해 보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시 초토화할 수 있는 항공모함까지 출격시켰지만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나 코카콜라를 불매했다고 미국에게 월마트를 영입 정지시키고 미국 관광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내부를 살살이 들여다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는커녕 한국 관광객을 일본으로 돌리고 한국상품 대신 일본상품을 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공동 투쟁한 피로 맺어진 친구이다. 그런데 한국 제재의 일환으로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잠정 폐쇄한 조치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대국담치 않은 행위이다. 중국은 일본이 1937년에 30만 중국인을 무참히 도륙한 난징대학살을 다 잊었는가. 현재도 중국은 일본과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적대적 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에는 눈을 감고 한국에는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는 괴롭히는 소인배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드 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를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핵실험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대

북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제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감싸고 돌면서 한국의 자기 방어적인 조치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미국의 사드 배치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은 실질적인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광적인 도발 행동을 막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중국도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사드 보복으로 관광 여행업계의 손해가 막심하며 롯데에 납품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어렵사리 국교를 맺은 지 25년 되는 올해 한국과의 우호관계가 손상되고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드 보복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